



전력산업기반기금 6,046억 원 조성

산자부는 [제1차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 6046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2001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2001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안)]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추진의 일환으로 그 동안 한전이 준정부적 입장에서 수행하던 수요관리·기술개발·도서벽지전화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을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따라 2001년 하반기부터는 정부로 이관해 추진키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대 권욱현 교수(대한전기학회장)가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김동원 자원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위원들에게 전력산업의 경쟁체제도입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혁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01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산자부는 전력산업이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예상되는 민간사업자의 공익기능 수행회피에 따른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순수공익기능을 중심으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순수공익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해 기금운영을 최적화하기로 했다.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은 ▲한전에서 수행하던 30개 사업 중 수요관리·전력산업연구개발·전력공익·타에너지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은 기반조성사업으로 이관해 계속 지원 ▲전기요금특례지원, 산

업·농사용 등 원가이하 전기공급 부담, 제주지역 전기공급 결손지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원자력 연구개발기금 출연등 11개 사업은 한전 및 발전자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지원타당성이 미약하거나 타사업분야에 포함해 지원이 가능한 중전기기 시험설비설치사업, 국가산업정보화사업, 에너지경제연구원출연사업은 종료 ▲국가간 계통연계기술 개발, 전기품질·시공기술개발, 전력산업통계 DB 구축 등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연구개발사업 7개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01년도 사업별 지원규모는 전력수요 관리사업 분야에 1211억원, 연구개발사업에 445억원, 도서벽지전력공급 등 공익사업에 872억원, 무연탄·LNG·열병합·대체에너지 등 타에너지지원사업에 3451억원 등 총 60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15억원을 조성해 총 6046억원이 된다.

사업별 소요재원은 4월 전기요금부터 부과되고 있는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기금의 설치·시행이 8월 이후로 책정되는 점을 감안, 한전에서 총 소요사업비의 41.7%를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를 기금에서 지원하게 된다. 또한, 2001년도 시행계획과는 별도로 2002년도 시행계획을 금년 하반기중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수립방안]은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폐지된 [장기전력수급계획]을 대신해 경쟁체제하에서 장기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전문가로 구성된 5개소위원

회(수요예측, 발전설비, 계통설비, 수요관리, 총괄정책)에서 실무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외공관에 수출전담반 설치

벤처, 플랜트 등의 수출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 대외경제 활동을 종합 지원 할 수 있는 해외거점이 주요공관에 설치된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경제관련 최고위원회'에 참석, 최근 수출입 동향 및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장관은 "외환위기 이후 상무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이 대거 철수, 해외 수출지원체제가 크게 위축돼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실물경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수출투자유치반을 해외 현지 거점에 확충하는 방안을 청와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무관은 23개국 34명에서 외환위기 이후 19개국 25명으로 줄었으며 무역관은 118개국 649명에서 101개국 565명으로 축소, 운영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전수준만큼 상무관을 우

선 증원하고 무역관도 10개를 신설하는 등 공격적 해외 마케팅에 나설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최근 수출부진과 관련, 장 장관은 "단기적으로 해외마케팅 강화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상품의 고급화, 다양화 노력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등 수출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 장관은 수출에 대한 당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면서 특히 "올 1조 2000억원 규모의 수출보험기금을 내년에 3000억원 더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대상을 기존에 가능한 항목만 규정했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불가능한 것만 지정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이달 중 전환,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간의 플랜트 보증비율을 70대 30%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 14개 도서 벽지에 24시간 전기공급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14개 도서 벽지에 24

시간 전기가 공급된다. 산업자원부는 내년 말까지



30호 이상이 거주하는 6개 섬지역에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하고 한전 전력계통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한 5호 이상이 거주하는 8개 도서 벽지에 설비를 보강해 24시간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내년 한해동안 총 사업비

107억 8천 5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사업 재원은 정부가 25억원, 지자체가 25억원, 한전이 54억9천 100만원을 출연하며 나머지 2억 9천 400만원(2억 5천900만원은 재정융자)은 지역주민이 부담키로 했다.

발전 분할후도 전기품질 양호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발전부문 분할 이후에도 전기품질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올 상반기 동안 전기품질 지표는 발전부문 경쟁체제 도입에 의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발전사업자·전력거래소등 전기사업자간 유기적인 협조로 주파수와 계통전압등에서 99.9% 수준의 균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기위원회는 또 전기 사용자가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정전지표는 작년 동기 수준인 8분대(호당)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정전지표는 20분대(2000년 1년 평균)를 유지해 같은 기간동안 프랑스 60분, 미국 70분, 대만 80분 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기위원회는 이 같은 실적은 그동안 전기사용자 보호시책으로 추진한 무정전공사도입과 배전자동화사업등의 영향이 커졌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앞으로도 전기품질의 일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계통파급 등 중대사고의 경우 발전·송전·거래소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실시, 전력설비의 효율적 운영과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산자부, 시장다변화상품 발굴 지원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수출회복 비상점검 및 대책회의’에 참석해 최근 들어 저조한 수출실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과 상품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위해 세계 일등 상품 발굴·

지원강화, 2단계 기업규제 혁파, 플랜트 수주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식 장관은 또 올 4·4분기 이후에는 미국 경기 호전 등에 힘입어 수출회복이 기대되며 내년에는 디지털 가전, 플랜트, 부품·소재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수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업계는 자신감을 갖고 수출확대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역협회 주최로 마련된 이날 수출대책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 무역협회 회장단 등 협회 이사 기업이상 50여개 업체와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외교부, 수출지원반 구성

외교통상부는 수출부진 타개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교부 본부에 김종훈 지역통상국장을 반장으로 17개 과·팀장이 참여하는 '수출·투자유치 지원반'을 구성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수출·투자유치 지원반은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의 수출지원시스템을 점검하고 재외공관이 수집한 시장·입찰정보

등 통상정보를 우리업체에 전파하는 한편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각 공관에 구성된 '통상투자종합지원반'을 통해 정보기술 제품, 플랜트, 문화콘텐츠, 관광상품 등 유망산업의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전개키로 했다.

조달청, 42개 품목 2,030억 구매

조달청은 배전반, 삼상전력 등 총 2,031억원 규모의 각종 물자 구매에 나섰다.

조달청은 최근 시설공사용 자재와 물자를 적기에 공급키 위해 배전반, 삼상전력 등 총 2,031억원 규모의 각종 물자 구매에 나섰다.

조달청은 최근 시설공사용 자재와 물자를 적기에 공급키 위해 배전반, 삼상전력, 레일 등 41개 품목 1,941억원 어치를 일반 내자로 구매하고 팬코일유니트 90억원 어치는 국체입찰 방식으로 조달하는 등 총 42개 품목 2,031억원 규모의 각종 물자를 이달 중 조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전국 전기공사에 사용될 특고압

반 등 배전반 500억원 상당을 단체수의계약방식으로 구매할 방침이며 철도공사에 사용할 레일은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일반단가방식으로 486억원 상당을 구매한다는 것이다.

또, 축열식온풍난방기 구매에 64억원, 에너지절약형 냉난방기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일반 경쟁을 통해 40억원 어치를 조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삼상전력, 용접철망, 수로관 등도 우수 제품 생산업체나 등록업체, 관련 조합 등을 대상으로 일반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 조달키로 했다.

한편 조달청의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에 앞서 중기청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단체수의계약을 외면하

는 사례가 많다는 중소업체의 지적에 다른 최근 정부 및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단체수의계약과 관련한 업무협조를 위해 각 해당 구매기관에 중소

기업제품 구매증대 및 설비기자재 분리발주 이행 촉구 문서를 발송했다.

조달청, 수해 中企 지원

조달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선금지급을 확대하고 납품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서울 등지에 집중호우가 내려 곳곳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수해복구 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우선 각급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 및 주요도로 등의 복구 자재인 철근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등 주요 시설자재를 최우선 공급하고 수해를 입은 조달계약업체에 대해서는 선금지급을 확대하고 납품기한 연장, 비축물자 우선 공급 등을 지원한다. 특히 수해를 입은 조달물자 계약업체에 대해 계

약금액의 50%까지 지급하던 선금을 70%까지 확대 지급하고 금융기관(농협) 신용대출도 적극 지원한다.

또, 알루미늄, 전기동 등 비축원자재 판매대금 상환기간을 연체이자 없이 3개월 연장하여 자금 부담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각 시·도 재해대책 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수해피해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조치하고 수해지역 공공기관과 조달업체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는 서울지방 조달청 등 산하지방 조달청에 최대한 우선 지원도록 조치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보증제 도입

앞으로 조달청의 입찰이나 계약에 필요한 보증업무를 각기업의 컴퓨터 단말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8월 13일 공고분부터 업체가 전기공사 공체조합등 10개 보증기관에 컴퓨터로 보증신청을 하면 이들 기관이 전자보증서를 발급, 한국전산원을 거쳐 조달청에 전송하고 조달청에서는 보증응답

서를 보증기관에 회신하는 전자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10개 보증기관이 그동안 각각 사용해온 보증용어를 통일하고 서식을 표준화하여 공공부분과 민간부분까지 전자보증이 가능토록 했다.

이제까지는 입찰이나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보증사를 직접 방문하여 종이에 인쇄된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다시 조달청을 방문하여 제출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과 비용낭비를 초래해 왔다.

전자보증에 참여하는 기관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비롯 서울보증보험(주), 신용보증기금,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기계공제조합등 10개 기관이며 보증의 종류는 입찰과 계약, 선금, 하자보수등 4종이다.

조달청의 관계자는 이번 전자보증제도 시행으로 국가적으로 연간 약 120억원의 경비절감효과가 나타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 20개 대기술이전센터 구축

산학협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다.

중소기업청(청장 최동규)은 자체기술개발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우수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의 기술을 활용해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국 사립대학에 기술이전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연구논문 발표수가 많은 포항공대 등 10개 대학을 시범적으로 기술이전센터로 지난해 지정된 10개 대학에게는 운영실적에 따라 4

천 500만원에서 5천 500만원까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올해 신규로 지정되는 10개 대학에 대해서는 기술이전 능력등을 평가해 대학당 5천 500만 원에서 6천 5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이전센터로 지정된 각 대학은 2인 이상 상근 직원배치, 기술이전에 필요한 D/B등을 갖추어야 한다.

올 신규지정은 공과대학이 있는 사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8월중에 신청을 받아 10개 대학을 선정한다.

기술혁신 中企 100% 신용대출

정부는 앞으로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협조해 운전자금전액을 신용대출 해줄 방침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운전자금은 30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100%, 신용보증과 원스톱 대

출절차를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청장 최동규)은 최근 산업은행, 기업은행, 조흥은행, 한빛은행, 하나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체결하고 중기청이 발굴·선정한 'INNO-BIZ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100%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5개 참여은행은 일반 기업보다는 낮은 금리로 간단한 심사를 거쳐 대



출해주라고 했다.

현재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담보가 부족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경우, 기술신보가 최고 85%까지 보증하고, 나머지는 대출은행의 신용평가로 자금을대출했으나 심사절차가 까다로워 어려움이 많았다.

중기청은 앞으로 INNO-BIZ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혁신개발 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컨설팅지원 사업 및 기술지도 등 중기청 기술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판로, 인력, 정보화 및

세제지원등 각종 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INNO-BIZ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먼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통해 'INNO-BIZ 평가지표'를 다운받아 자가진단을 통해 스스로 평가해 본 결과, 600점 이상이 나오면 자기진단 결과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센터에 제출하면 전문가들의 현장심사를 통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중기청, 부품소재 개발·490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은 올 하반기 중소기업 부품·소재 공동개발사업 지원 대상으로 250여개 과제(품목)를 선정, 총 4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기업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에서 무담보, 무이자로 총소요자금의

60% 한도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서 접수 일정 및 지원대상과제는 8월 초 공고하였으며 신청에 필요한 관련서식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올 상반기에도 114개 업체를 선정 총 208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특허청, 특허후견인제도 시행

산업재산권 관리가 취약한 36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후견인제도가 실시된다.

특허청(청장 임내규)은 최근 5년간 특허·실용신안 21~100건을 출원한 328개 업체 가운데 36개 업체를 '중견기업 특허후견인 시범업체'로 최종 선정했다. 기술분야별로는 전기·전자분야 20개, 기

계분야 8개 및 화공분야 8개 업체이다.

특허청 국장급 19명으로 구성된 특허후견인은 기업체에 직접 방문이나 면담 등을 통해 산재권관리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작업을 실시하고 문제점 도출 및 기업별 특성에 맞는 각종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산재권과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을 수렴

하고 필요시 특허청의 제도개선에도 반영토록 했다. 이밖에 업체의 연구인력, 산재권인력 등을 대상으로 산재권 실무교육을 하거나 각종 특허기술 및 연구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한다.

특허후견인제도 시범업체 36개사 - 유일테크산업(자동차부품개발)▲롯데기공(가스보일러)▲계양전기(전기전자, 기계)▲삼손(비금속광물제조)▲제룡산업(전기,통신)▲다날(정보,통신)▲우리기술(전기,전자)▲케이디아컴(전자)▲케이.씨택(반도체장비)▲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학문전문야)▲신우전자(가스기기)▲재단법인목암생명공학연구(생명공학)▲대웅제약(제약업)▲유베라.베라체토(의류)▲

신성엔지니어링(토목)▲한국하이테크공업(전기전자)▲대한주택공사(건설)▲주성엔지니어링(전자(반도체장비))▲코스텔(전기,전자)▲파세코유병진(전기,전자,기계)▲신한시스템(통신)▲재원 조이스(전기,전자)▲현대종합금속(기계(금속))▲코리아코프(자동차,물류기기)▲한국화이바(유리,복합제품)▲엘지마이크론(전기,전자)▲세향산업(전기,전자)▲실트론(화학,전기,전자)▲대원산업(전기,전자,기계)▲에이스랩(필터)▲한국수자원공사(수도,수질)▲한국조폐공사(화학)▲지니택(반도체장비)▲정보통신연구진흥원(정보통신)

中企 77% 北진출 희망

중소기업 가운데 77.1%가 앞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과 기협중앙회가 2천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남북경협사업 추진계획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업체 가운데 3.9%는 당장 남북경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73.2%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응답해 전체의 77.1%가 남북경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남북경협에 나서는 이유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 전체의 59.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통일 후 북한 시장확보와 원부자재 조달을 꼽았다.

경협추진방식은 위탁가공 40.4%, 합작투자 25.7%, 단순교역 16.5%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 진출 희망지역은 물류비가 적게드는 개성 등 휴전선인근지역이 52.8%로 가장 많았다.



정부, 북한에 전력공급 검토

정부가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재식 산자부 장관은 서울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이코노미스트 조찬 강연에서 “북한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북에 전력을 공급하는 대신 북한은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철도 수송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 장관은 산자부는 북한에 전력지원 대가로 북으로부터 망간이나 마그네슘을 현물로 받는 방안과 북한 내 철도 수송료와 상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철도 수송과 관련해 “강원도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연탄을 중국서 들여올 경우 선박수송보다는 북한 내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국

산 유연탄을 북한철도를 이용해 반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관계자는 “북한은 경기도 양주~황해도 남천리 구간에 송전탑을 세워 50만kW를 송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요청을 들어주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대북 송전에 앞서 변전소 및 선로건설 등 사전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수천억원의 비용문제 해결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4차 남북장관급 회의에서 200만kW의 전력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안에 우선 50만kW송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남북당국자는 지난 2월 한 차례 남북 한간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양측의 협력한 입장차이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해외플랜트 수주 최대 호황

발전기자재와 송배전설비 등의 수주호조에 힘입어 해외플랜트 수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자부는 지난 2/4분기 해외플랜트 수주실적은 50건, 32억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1/4분기에 비해 79%가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1년 플랜트 수주 실적 집계이후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또 올 상반기 총 수주액은 88건, 51억달러로 집계됐다.

상반기 수주 실적을 금액별로는 보면 1억달러 이상 대형 플랜트가 12건, 35억달러에 달해 70.2%

로 가장 많고 이어 5천만~1억달러 9건, 5억달러,

5천만달러 이하 67건, 9억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현대중공업 12건, 17억2천만달러 ▲두산중공업 19건, 10억9천만달러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이 8건, 5억1천만달러 등이다.

설비별로는 ▲발전기자재와 송배전설비가 46건, 5억5천만달러 ▲해양석유생산설비 10건, 16억3천

만달러 등이다.

이처럼 해외플랜트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고유가 지속으로 중동산유국의 석유플랜트 발주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담수·발전설비 및 해상원유생산 설비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화호에 조력발전소 건설

경기도 안산시가 국내 최초의 상용 조력발전소를 건설한다.

안산시는 12만5000kW(125MW)규모의 조력발전소를 미국 메이플라워 그룹의 전액출자로 내년 3월 시화방조제에 착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체에너지 전문기업인 미국 메이플라워 그룹(The Mayflower Group)은 지난해 시화호에 대한 조력발전소 타당 검토작업을 마치고 최근 안산시에 총 2억달러 규모의 건설계획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에 따르면 메이플라워 그룹은 M.I.T공대 부설 N.E.I(Nature Electric International, Inc) 연구소의 기술을 토대로 1단계 타당성 작업과 2단계 발전시설 테스트를 거쳐 발전용량과 위치선정이 끝나는 2003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04년부터 시운전에 들어가게 된다.

메이플라워 그룹은 내년 3월부터 6000만 달러를 들여 시화방조제에 500kW급 발전기 2대를 설치, 현장실험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시화호 주변환경

과 생태계조사, 수질정화 효과에 대한 실험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메이플라워 그룹은 이 실험에 성공할 경우 나머지 1억4천만달러를 투자, 시설용량 12만500kW급 발전소 건설공사에 들어가 오는 2004년 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력발전소에 채택되는 선형방식(Liner Hydro Engine)은 미국 N.E.I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신공법으로 방조제 밑바닥을 깊이 판뒤 터빈을 설치, 밀물과 썰물시 발전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에 의한 공법으로는 세계최초다.

이 방식은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해수를 모아 두었다가 방출할 때 전력을 생산하는 기존의 별브 형태(Bulb Type)에 비해 건설비가 700억원 가량 적게들면서도 많은 양의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안산시는 밝혔다.

안산시는 메이플라워 그룹에서 발전소 건설비용 전액을 자체 부담하는 대신 운영권을 줘 전력판매 등을 건설비 회수가 끝나는 향후 20~30년후 기부

체납 방식으로 소유권을 돌려 받는다.

안산시의 이번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신기원을 이뤘다는 자체 평가와 함께 환

경을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인 관급공사로 잘 알려진 시화호의 수질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청, 전기철도 국산 애자 전면 사용

철도청은 그동안 수입품에 의존해 사용해 오던 자기제 애자류를 대신해 국산 고분자제 애자를 전면 사용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사용중인 전기철도용 애자류(자기제)는 일본,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주로 생산 공급돼 왔으나, 이번에 국산 고분자제 애자를 사용함으로써 외화절감 및 국내 관련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청은 91년 전차선과 조가선을 잡아주는 가동 브레이크와 전주를 절연하는 고분자 장간애자의 연구개발에 착수, 지난 96년 국산화에 성공했다.

또한 97년 4월부터 전철구간에 현장시험을 거친 결과 전기적 기계적 성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철도청은 이 고분자제 애자를 99년부터 일부 사용해 왔으며, 이번에 전면 사용키로 결정함에 따라오는 2020년까지 총 539억원 정도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도청은 앞으로 국산 자기제 현수애자와 외산 지지애자등도 고분자 애자로 전환하는 등 국산 철도용 애자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